

‘카탈루냐 자유 만세!’ - 카탈루냐의 독립을 향한 정치적 움직임과 그 전망

권가람

1.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과 한계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인구 750만 명의 자치주이며, 이곳의 주도(州都)는 바르셀로나이다. 전통적으로 일부 민족주의자만이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2010년부터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카탈루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카탈루냐의 주지사 아르투르 마스(Artur Mas)는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지역의 총선을 2015년 9월 27일로 앞당겨 조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68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개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카탈루냐 헌법을 공포하고 카탈루냐의 독립을 선언하기로 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신문사의 예비 득표율 조사 결과, 스페인 민족주의 경향이 가장 강한 보수적 일간지인 『아베세』(ABC), 『라 라손』(La Razon)을 포함하여 모든 신문이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7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르 몽드』, 『슈피겔』과 같은 유럽의 주요 언론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의 원인을 두 가지의 대외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고한다. 첫째,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카탈루냐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2008년 이후 시작된 전 지구적인 경제적 위기와 관련이 있다.

특히, 카탈루냐가 속한 스페인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와 함께 유로존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국가의 재정위기가 카탈루냐 주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주권 분리의 움직임 또한 카탈루냐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한다. 스코틀랜드인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 국민당(Scottish National Party)의 주도 하에 2014년 9월 독립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¹⁾ 유럽의 주요 신문과 정치학자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하였던 초국가적 프로젝트 유럽연합(EU)이 처한 위기의 징후로 스코틀랜드와 카탈루냐의 정치적 상황을 서유럽의 분리주의(separatism)로 동일 선상에 놓는 해석을 시도해왔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유럽의 정치라는 글로벌한 맥락과 연결 지어 해석하려는 이와 같은 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카탈루냐가 독립을 원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카탈루냐와 스페인 정부의 역사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지역적인 맥락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독립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를 원하게 된 최근의 변화는, 독재자 프랑코의 사망 이후 민주정으로 변모하였다는 스페인이 2000년대 이후 영토 내 민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장하기 위한 시위를 위해 시청광장에 모인 독립주의자들. 별이 그려진 국기는 카탈루냐의 독립 지지를 의미한다.(필자 사진)

1) 주민투표의 결과 투표자 55%가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무효화되었다.

2. 카탈루냐 독립운동의 기원: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에 대한 위헌 판결과 독립 여론의 확산

카탈루냐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족정체성이 강한 곳이다. 카탈루냐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스페인의 자치주이지만, 견고한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주권을 행사해 왔다. 10세기 카롤링거 왕조의 영향력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고, 11세기 아라곤 왕국과 연합국을 형성하였다. 아라곤의 페르디난드 왕이 카스티야의 이사벨 2세와 결혼하여 연합 왕국을 이루었을 때에도, 카탈루냐는 독자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정체성이 카스티야 지방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갈 때, 카탈루냐는 항상 타자로서 배척과 구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정복 이후, 대서양 무역에서 카탈루냐인의 참여는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패배한 카탈루냐에게 내려진 스페인의 처방은 당시까지 적용되던 카탈루냐 법 대신 카스티야의 법을 적용하는 것과, 카탈루냐어의 사용을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었다.

20세기 들어와 스페인의 카탈루냐인에 대한 배척과 탄압은 1939년 프랑코의 독재정이 시작되면서 정점에 달한다. 스페인 내전 당시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원을 받은 프랑코는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 파시스트 정권은 1975년까지 생명을 이어간다. 서유럽에서 장기집권에 성공한 유일한 파시스트 국가의 사례이다. 이 시기 스페인 각 지역의 민족주의자는 공화주의자와 함께 프랑코의 숙청 대상이 되었다. 또한 프랑코 정권은 카탈루냐 지역의 민족정체성 약화를 위해 카탈루냐어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다. 카스티야어(즉,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스페인 남부 지방 출신을 카탈루냐 지역의 중등교사 및 경찰로 대거 파견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카탈루냐어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약화시켰으며, 카탈루냐 정체성을 표상하는 출판 및 예술 활동을 금지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민족정체성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람들은 카탈루냐인 가운데에서도 소수였다. 자신을 스페인인이 아니며, 카탈루냐어만이 모국어

라고 정의하는 강성 카탈루냐 민족주의자조차 주권 분리는 법률상 소모적인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족정체성이 보전되는 한 정부의 형태는 자치주이든 연방이든 상관없다는 정치적으로 실용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자치주의자 및 연방주의자가 스페인과 완전한 주권 분리를 지지하게 된 현재의 상황은 스페인 역사상 예외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 스페인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2010년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개정된 카탈루냐 자치주법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개정안은 1979년 제정된 주헌법을 수정한 것으로, 카탈루냐를 자치주라는 행정단위를 넘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민족’임을 명기하는 것이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카탈루냐인이 원하던 민족 독자성을 인정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또한 2006년 당시 스페인의 집권당이었던 사회당은 카탈루냐 정부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였고, 그 결과 2006년 자치주 헌법에는 교육, 조세 및 의료에 있어서 카탈루냐 주정부가 확대된 권한을 갖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사회당의 입장에서는 카탈루냐의 분리 성향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카탈루냐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민족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정치적 도약으로 여겼다. 카탈루냐 의회 및 주민투표를 통해 채택된 개정안은 마드리드의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민족주의 성향의 국민당(Partido Popular)은 같은 해 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4년 만에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위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카탈루냐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판결이 내려진 지 2주 만인 2010년 7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가 결정한다’(Som una nació. Nosaltres decidim)라는 슬로건 하에 카탈루냐 인구 전체의 약20%인 150만 명이 운집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1978년 카탈루냐 자치권 확보를 위해 100만 명이 집결한 이래 약 30년만의 재결집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날 거리로 나온 대부분의 사람이 카탈루냐 주를 상징하는 세네라(senyera) 기 대신, 독립을 상징하는 에스텔라다(estelada) 기



카탈루냐 주를 상징하는 세네라 기(왼쪽)와 카탈루냐 독립을 상징하는 에스텔라다 기(오른쪽)

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집회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자치주의자 및 연방주의자가 깃발을 구입하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바르셀로나 전 시내의 잡화점에 마련된 에스텔라다 기가 동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에스텔라다 기를 구매하기 위한 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30년 만에 150만 명의 인구를 다시 거리로 불러낸 것은 유로존의 경제위기도, 스코틀랜드의 분리주의 여파도 아닌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었다. 이날 거리로 나선 이들에게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2010년 판결은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에 대한 단순한 거부라는 일회적 사안이 아니라, 카탈루냐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이 구조화 및 제도화되었으며, 이를 개선할 법률적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탈루냐 자치주 헌법 개정안이 헌법 2조를²⁾ 위배하였으며, 스페인 국민 전체가 투표하고 승인한 헌법의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자치주법에 대한 추가적 삭제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탈루냐인은 이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독립운동에 참여해온 한 주민은 “현재의 스페인 헌법은 독재정권이 붕괴된 이후에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군인들의 총부리 하에서 제정되었다. 그 문서가 우리의 정치적 자결권을 막는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법이 아니라 무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스페인 헌법은 독재정 종식 후에도 처

2) 스페인 헌법 2조는 “헌법은 모든 스페인인의 공통된 조국이자 분열될 수 없는 스페인의 절대적인 국가적 통일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민족성을 가진 영토와 지역에 자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별받지 않은 군부 정권의 영향력 아래 1978년 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헌법의 민주주의적 정통성 논란은 스페인 사회에서 지속되어왔다. 특히 스페인이 다민족국가임을 인정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및 바스크지역에서 있어 왔는데, 그것은 1992년, 2011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통성을 의심받는 헌법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투표를 통해 전해진 변화의 요구를 무시한 사례가 되었다. 나아가, 카탈루냐인에게는 스페인 내에서 민족적 지위 향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1978년 스페인 헌법의 작성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지역사적 맥락에서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미미한 이유는 21세기 주권국가 중심의 세계체제가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주권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군사, 법률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며, 자신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점유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이 본격화된 이후, 스페인 외무부는 ‘민주주의적 공존을 위하여’(Por la convivencia democrática)라는 이름의 210여 페이지에 달하는 카탈루냐 독립 반대 이유를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재외공관에 배포하고 주재국에서 정치적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유럽의회 의원을 통한 스페인 정부의 반독립주의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이라는 주권국가는 합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카탈루냐인의 목소리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에는 카탈루냐 주의 권한이나 대외적 네트워크가 미약하다.

또한, 카탈루냐 현지 사정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부재한 스페인 엘리트집단의 카탈루냐에 대한 시각이, 수도 마드리드에 거주하는 외신에 의해 외부로 생산되는 것도 문제이다. 수도와 지방이라는 구도 속에서, 카탈루냐인의 주장은 ‘민족’의 이야기가 아닌 ‘지방민’의 목소리가 되며, 민족자결권에 의한 민족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중앙집권화에 불만을 품은 지방의 분리운동으로 격하된다. 이러한 해석적 구도에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에는,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외신이 카탈루냐어에 대

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카탈루냐어로 생산되는 기사, 증언에 대한 고찰도 거의 부재하다.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정치적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내부의 독립에 대한 여론은 힘을 얻고 있다. 독립운동이 시작된 이후 스페인 주요 일간지인 『엘 파이스』(El País) 및 카탈루냐 정부의 여론조사 기관 (Centre d'Estudis d'Opinió, CEO)에 따르면 독립에 찬성하는 여론은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고, 2015년 9월 27일에 실시되는 카탈루냐 조기총선에서는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 대표의 연합인 '다함께 [독립을 위해] 찬성합시다'(Junts pel Sí)와 '민중 대표 후보자 모임'(Candidatura d'Unitat Popular, CUP)이 과반수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독립에 대한 찬성 여론을 하나의 사회적 운동의 형태로 조직하고, 확산한 것은 뿌리 깊은 협회문화에 바탕을 둔 카탈루냐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3.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협회문화의 전통과 국경일 시위의 강화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결이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정치적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은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0년 이후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Assemblea Nacional Catalana)로서, 2015년 1월 등록된 인원은 4만 명을 약간 웃돈다. 이 단체는 매주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의 성사를 위해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독립 이후의 정치, 경제 전망을 홍보하는 공개강연 등을 개최한다. 이 단체에서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던 몇몇 회원은, 2015년 9월 실시될 조기 총선에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통합당, 카탈루냐 좌파 공화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게 될 시민 대표로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민족 협의체의 탄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곳 회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투표 이

외의 정치적 활동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들은 특별히 독립운동가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을 협의체 활동에 할애한다. 구엘 공원으로 유명한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구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한 봉사자는 “우



2015년 9월 27일 개최될 카탈루냐 조기 총선을 앞두고 거리캠페인을 벌이는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 (ANC)의 회원들(필자 사진)

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카탈루냐 민족만큼 연대감이 강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도 나는 자원봉사를 했고,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마라톤 행사 때도 자원봉사한 적이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자발적인 독립운동의 참여 스펙트럼이 넓다는 사실은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지속가능한 견고한 기반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운동의 방식 또한 매우 창의적인데, 지역의 스포츠 협회는 스페인 주민등록증 멀리 던지기 대회와 같은 행사를 마을 축제에서 개최하기도 한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빠른 시간 내에 체계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협회(associacion)에 소속되어 단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카탈루냐 중산층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마을마다 수없이 존재하는 이웃협회, 트레킹 협회, 합창단 협회, 인간탐 쌓기 협회 등은 평상시에 동네 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 활동을 하는 곳이면서, 서로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카탈루냐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내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프랑코의 독재 시절, 카탈루냐 문화가 탄압의 대상이 되었을 때, 카탈루냐 사람들은 정치적인 직접적 저항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협회의 문화 활동을 통해서 고유의 문화를 지켜냈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10년 이후, 각종 협회에서 형성된 친지 및 이웃 간의 지역적 관계망은 어떤 사회적 자원보다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독립여론을 확산시키는 밑바탕이 되어왔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독립운동의 역량은 지난

4년간 매년 9월 11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한 카탈루냐 국경일 시위에서 잘 드러난다. 1714년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스페인과 프랑스군에 패배한 역사적 순간을 기리는 이 날을 현지인은 디아다(Diada)라고 부르는데, 독립주의자의 독립 요구 시위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2010년 이후 이 날의 시위는 카탈루냐 민족 협의체의 주도 하에 매년 참여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탈루냐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9월 27일 조기총선을 앞둔 2015년의 국경일 시위는 ‘카탈루냐 공화국을 향한 자유의 길’(Via lliure cap a la república catalana)이라는 슬로건 하에 바르셀로나 중심을 관통하는 메리디아나 거리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에는, 전체 인구의 25%에 육박하는 200만 명의 시민이 카탈루냐 공화국의 기본적인 사회 가치를 상징하는 10가지 색깔의³⁾ 마분지를 들고 집결하여 정치적 미래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였다. 이날, 메리디아나 거리를 가로지르는 ‘카탈루냐 만세, 카탈루냐 자유 만세’(Visca Catalunya! Visca Catalunya Lliure)의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웅장했다.

몇 년간 이어진 시민사회의 집약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느린 정치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카탈루냐인이 점차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2년 ‘카탈루냐, 유럽의 새로운 국가’(Catalunya, nou estat d’Europa), 2013년 ‘독립을 위한 카탈루냐의 길’(Via Catalana cap a la Independència), 2014년 ‘카탈루냐의 길 V’(la V), 그리고 2015년 ‘카탈루냐 공화국을 향한 자유의 길’(Via lliure cap a la república catalana)까지 매년 150만 명 이상이 9월 11일 바르셀로나에 동시에 모인 지 벌써 4년째이다. 현지인은 ‘카탈루냐의 새해는 9월 11일에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경일 시위에 중요성을 부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와 같은 민족적 열광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민족 협의체의 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행인과 운동가는 매년 슬로건과 착용하는 티셔츠의 색깔을 바꿔가며 바르셀로나에 집결하는 퍼포먼스가 정치적 현실에 정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운동이

3) 각 색이 상징하는 기본 가치는 다음과 같다. 노란색: 민주주의, 파랑색: 지역적 균형, 빨간색: 연대, 하늘색: 세계적 도약, 연두색: 다양성, 초록색: 지속 가능한 발전, 보라색: 평등, 카키색: 사회적 정의, 자주색: 혁신, 주황색: 문화 및 교육.



2015년 9월 11일 '카탈루냐 공화국을 향한 자유의 길' 에 참여한 시민들
(출처: A. Beltran, <http://www.elperiodico.com>)

본격화되기 시작한 초기인 2012년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이다. 한편에서는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위기감이 교차하는 상황이 2015년 9월 카탈루냐 사회의 단상이다. 그렇다면, 카탈루냐의 정치적 미래가 스페인 및 나아가서는 유럽의 역사적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4. '지역의 연합' 으로서의 유럽?: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스페인 및 유럽 연합의 입장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은 스페인 사회에서 민주주의란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다. 스페인은 프랑코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협력자에 대한 처벌 없이 '무혈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1978년의 헌법 공포와 이에 대한 88%의 찬성투표는 새로운 정권의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스페인 영토의 다양한 민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헌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민족의 독자성을 강조해 온 카탈루냐 및 바스크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력한 스페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국민당은 정권을 잡을 때마다, '평등한 스페인 시민권'을 강조하며 영내 제민족의 자치권 혹은 특권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발의해왔다. 또한 스페인의 일원주의자는 평등이라는 담론 아래 지속적으로 카탈루냐인을 타자화하고, 강력한 스페인을 방해하는 존재로 묘사해 왔다. 그러나 '평등한 시민권'의 함정은 개별 주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약자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카탈루냐의 독립운동은, 헌법에만 근거하는 스페인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직된 해석에 변화를 일으키고, 스페인 영내의 다양한 민족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기반을 자체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카탈루냐인의 독립운동에 대하여 스페인 정부가 취하는 것은 '공포 전략'이다. 스코틀랜드의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백서 발간을 통해 스코틀랜드 독립의 득실을 설득하고자 한 영국정부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카탈루냐의 정치적 움직임에 대하여 스페인은 근거를 통한 설득 대신 '카탈루냐가 유럽연합에서 쫓겨날 것이다', '유로화 사용 불가로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등 독립불가론만을 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협박 전략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카탈루냐의 독립주의자에게 유럽연합이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스페인 국민총생산의 20% 담당할 정도로 부유한 카탈루냐는 2008년 유럽의 경제 위기가 회원국에 연쇄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오히려 유럽연합에서 자동 탈퇴하는 것이 카탈루냐 경제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스페인이 유럽연합으로부터 진 엄청난 부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스페인의 협박에 수치와 논리적인 근거로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는 카탈루냐 독립주의 진영과는 달리, 마드리드의 중앙정부는 카탈루냐의 잔류를 설득하기 위해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독립불가론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간파한 몇몇 스페인 사회주의자는 헌법 수정을 통해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높이든가 혹은 기타의 방법을 통해 카탈루냐의 독립을 평화적으

로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스페인의 저명 언론인 이나키 가빌론도(Iñaki Gabilondo)는 2013년 열린 ‘카탈루냐의 길’ 집회 다음날, ‘카탈루냐가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다’라는 제목의 비디오에서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카탈루냐인은 거리에 나오는 대신 침묵시위를 통해 분리보다 통합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평했다.

사실 스페인의 공포 전략은 스페인이 그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스페인 국민 총생산의 20%를 담당하는 카탈루냐가 스페인을 떠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당장 큰 구멍이 생긴다. 스페인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은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 및 첨단기술 산업은 카탈루냐와 이 지역 다음으로 독립의 열망이 높은 북부 바스크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카탈루냐의 독립주의자는 부유한 지역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나,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카탈루냐 주정부의 재정적자는 1986년-2011년 사이 연평균 8%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카탈루냐 의료의 지속적인 민영화, 인프라 노후, 공교육 질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했다. 낙후 지역에 대한 생산의 혁신이라는 근본적 고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카탈루냐의 공공 영역의 붕괴는, 독립에 대하여 불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던 사람조차 독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지금 스페인의 경제위기가 부동산 건설업자와 스페인 국민당 정치인의 결합이 만들어낸 거품경제로 초래된 것임이 드러나면서 경제위기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부패한 정치와 연결되어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카탈루냐에 정착한 스페인 이민자 1세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합심하라’(Súmate)의 대표는 스페인을 ‘썩은 치즈’에 비유했다.

스페인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카탈루냐인은 스페인 정부의 다민족적 현실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타민족에 대한 강압적 정복이라는 역사에서 기원하는 ‘제국주의적 에토스’에서 찾는다. 고등학교 교장에서 퇴임한 이후 독립운동에 전념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아이샴플라(Eixample) 구역의 한 주민은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태도는 매우 오래되어 이미 유전자의 일부분으로 굳어졌다. 항상 제국이었던 스페인은

약자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제국에서 파시스트 정권으로, 그 다음에는 민주화로 전환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사실 전환(transition)이라기보다는 변환(transformation)이 맞다”라고 이야기한다. 카스티야 지방의 특권층이 아메리카 원정을 떠나기 전 이베리아 반도의 제민족을 통일하는 작업은 이미 스페인 제국주의의 초석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코의 독재 정권은 스페인 역사의 단절이라기보다 이민족 탄압이라는 역사의 연속이며, 현재의 카탈루냐 독립운동은 스페인 제국주의의 진정한 단절이나 연속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어느 누구도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다.

한편, 앞으로 전개될 카탈루냐의 상황은 유럽연합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유럽연합이라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정신을 대변하며 ‘유럽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장 모네(Jean Monnet)는 “주권국가를 기반으로 한 유럽에는 더 이상 평화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연방으로서 유럽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1943)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유럽의 아버지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은 지금 유럽연합의 전신 유럽공동체 설립 초안이 마련된 직후, “유럽 평화의 원동력이 될 유럽 연방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되었다”(1950) 라고 평했다. 힘의 논리로 작동하는 유엔과 달리, ‘주권국가 연합’을 넘어 ‘지역 연합’이라는 유럽연합의 모토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새로운 국제사회 리더십의 탄생이라는 기대를 모두에게 불어넣었다.

그럼에도 현재 유럽연합이 카탈루냐를 바라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카탈루냐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독립의 열망은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근본 정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브뤼셀에 유럽지역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대표직을 설치하는 등 지역 연합에 부합하는 행정적인 구색을 갖추었지만, 이는 지역의 경제적 요구를 전달하고 실현하는데 대부분의 역량을 할애할 뿐, 각자의 정치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브뤼셀의 거리에서는 비정기적으로 지역의 정치적 요구의 출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열린다. 카탈루냐인은 독립 주장이 민주적임을 유럽연합에 계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유럽이사회 의장은 “카탈루냐가 독립하여 신생국가가

될 경우 자동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되며, 가입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연합의 태도는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인권 보호에 있어서 유럽 국가의 공동적 책임을 주장하는 것과는 모순되며, 지역 연합이라는 공동체의 근본정신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유럽연합이 주권국가의 이익을 초월한 자유로운 독자적 정치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및 바스크, 프랑스 남부의 바스크, 이탈리아의 베네토, 벨기에의 플랑드르, 영국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독자적인 민족정체성을 주장하며 독립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온 곳이다. 카탈루냐가 독립에 성공한다면 나머지 지역의 정치적 청사진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주권국가의 영향력 약화를 의미하고, 유럽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권국가를 대표하는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엘리트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카탈루냐의 요구를 스페인 내부적 사안으로 돌리며 초조하게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유럽의 정치, 경제적 엘리트의 복잡한 계산 가운데 향후 카탈루냐의 운명은 유럽연합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표상이 될 것이다. 카탈루냐가 독립에 성공한다면, 지역 연합으로서 초국가 공동체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 경우 유럽연합은 크게 동요할 것이다.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스페인에게도, 유럽에게도 주권국가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대전이 종전 70주년을 맞은 2015년, 우리는 또 한 번 유럽의 질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권가람 — 서울대학교 인류학 석사